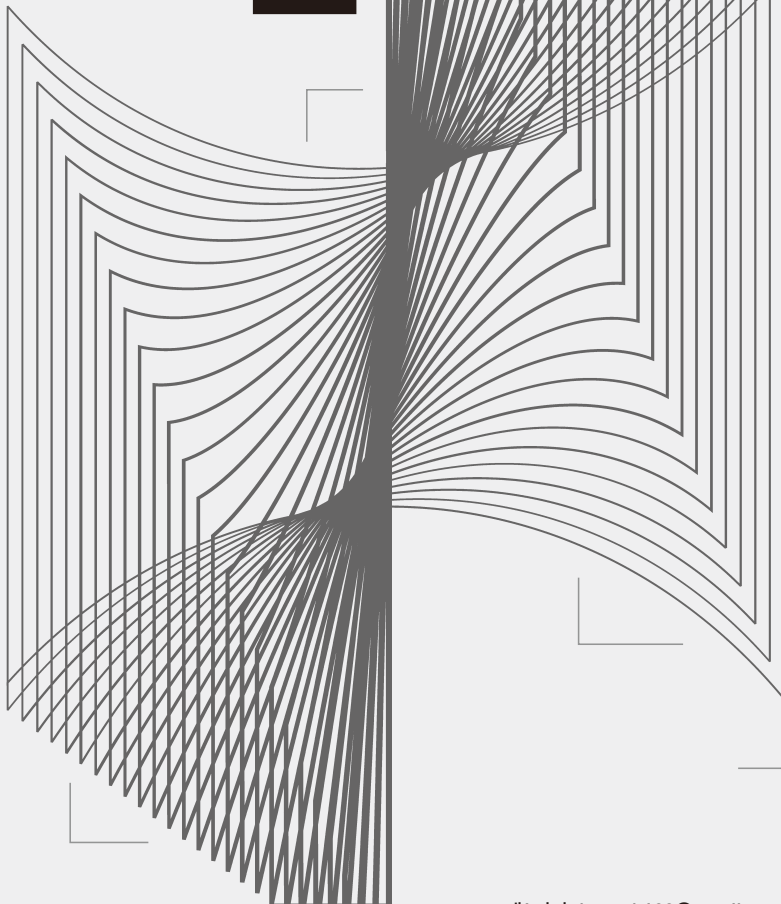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knpark123@gmail.com

칸트의 실천철학을 통해서 본 롤즈의 정치적 전회

박경남(KAIST · 디지털인문사회과학센터 · 연구조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6.8.59.9>

I. 서론

■ 롤즈(John Rawls)에 따르면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적절하게 할당되어 있고, 이득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¹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아갈 때보다 국가라는 사회 협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관계가 대체로 상호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을 통해 산출된 이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더 큰 몫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TJ, p.37)해주는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하게 된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그러한 정의의 원칙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도입

* 이 글은 2024년 10월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 제18회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칸트의 『법론』을 통해서 본 롤즈의 정의관」 및 2025년 5월 숭실대학교 철학과 제3회 숭실철학특강에서 발표한 「칸트의 『법론』을 통해서 본 롤즈의 정의관」을 수정 및 보완함.

1 존 롤즈,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23, p.40. 이하 본문에서 이 책은 TJ로 약칭하고, 인용 시 괄호 안에 약칭과 쪽수를 함께 표기한다.

한다. 이 유명한 사고 실험에서, 롤즈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국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참여하게 될 사회의 기본구조에 적용될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할 이들의 상황을 가정한다. 롤즈는, 우리가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 놓인 당사자라면 어떠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것인지 검토함으로써,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제안한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자신의 정의관이 많은 지점에서 칸트(Immanuel Kant)의 실천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정의론』의 초판 서문에서 롤즈는 “결과적으로 도달된 이론은 그 성격에 있어 지극히 칸트적인 것”(TJ, p.26)이었다고 말하며, 원초적 합의의 가상의 성격을 칸트의 사회 계약 이론을 인용하며 설명한다(TJ, p.46). 또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도출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의의 원칙들은 자율적 인간에 대한 칸트적 개념에 기초해 있는데, 롤즈는 이후 발표한 「도덕 이론에서 칸트적 구성주의(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에서 이에 대해 상술한 바 있다.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이해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그러한 자기 이해에 비추어 자신의 본성을 가장 잘 실현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원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정립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권위나 질서로부터 정당화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타고난 동물적 본능이나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율적이다.

그런데 롤즈는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²에서 자신의 정의관을

2 『정치적 자유주의』, 파주: 동명사, 2020. 이하 본문에서 이 책은 PL로 약칭하고, 인용 시 괄호 안에 약칭과 쪽수를 함께 표기한다.

칸트의 실천철학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후 정치적 전회(political turn)라 불리게 된 그러한 변화에서, 롤즈는 자신의 정의관이 칸트의 실천철학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원칙들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포괄적 교리는 한 개인의 믿음과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롤즈가 정치적 전회를 시도하는 주요 동기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포괄적 교리들의 다원성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종교적·철학적 신념의 관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이 공존하는 다원적인 사회이다. 롤즈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그러한 다원성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성을 발휘한 당연한 결과로서, 정치철학의 주요한 과제는 그러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정의관은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성적인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상호 화합과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정치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발견되는 포괄적 교리들의 다원성을 고려할 때, 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칸트의 도덕적 인간관과 사회관이 초월적 관념론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 칸트의 인간관 및 사회관을 통해 공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을 마련할 수 없다. 따라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칸트의 실천철학에 핵심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것과 달리,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칸트의 실천철학뿐만 아니라 여타의 포괄적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

치적 정의관으로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양립할 수 없는 다양한 종교적·철학적 신념들에 의해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포괄적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합당한 정의관에 상호 합의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인 지속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롤즈의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에서 각기 다르게 제시되는 칸트 철학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롤즈의 정치적 전회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필자가 이해하기에,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포괄적으로 이해된 도덕적 교리를 함축하지 않고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가 『정의론』에 이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견지하는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의 우선성 문제 및 시민 개념에 귀속시키는 도덕적 능력들에 대한 논의는 칸트적 자율성 개념에 기반한 올바른 것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통해서만 일관되게 제시될 수 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가령 때때로 합리적인 것이 합당한 정의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인 포괄적 교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축해야만 하고, 그러한 점에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이미 포괄적 교리들 사이의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II장에서는 『정의론』에서 제시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칸트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정치적 전회의 내용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그러한 정치적 전회의 난점을 칸트 철학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본다. 특히 정치적 전회가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여전히 합당성의 우선성 및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시민관을 통해 공리주의적 관

점을 논박해야 하는 한, 칸트적 자유주의의 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 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II.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시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고 실험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적 장치 중 하나는 ‘무지의 베일’ 개념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이 참여하게 될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도출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이 실제 어떤 사회적 운과 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무지의 베일 뒤에 있기 때문에, 가령 자신이 어떤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될지, 어떤 신체적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또한 그밖에 자신의 출생 지역, 나이, 성별, 심리적인 기질, 그리고 삶에서 추구하게 될 구체적인 최종 목적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개념을 통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들을 최대한 배제한 채 구성원들의 의무와 권리의 할당, 이득과 부담의 분배를 결정하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각 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특유한 입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게 되며,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동등하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 합의할 수 있게 된다.

무지의 베일 뒤에서 정의 원칙에 대해 합의해야 할 각 당사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도덕적인 인격체로 이해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들의 합의

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에서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롭다. 또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각자가 처하게 될 어떤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과도 무관하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데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또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권리와 의무, 이득과 부담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정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다.

원초적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서로를 오직 자유롭고 평등하며 도덕적인 인격체로만 여기기 때문에,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는 상황으로서 원초적 입장은 공정하며, 롤즈는 그러한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이 마찬가지로 공정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즈는 원초적 상황에서 채택될 정의의 원칙들에 입각한 정의관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한다.

롤즈에 따르면, 원초적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채택할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일컬어지는 다음 두 가지이다.

“제1원칙 -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TJ, p.400).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조건 하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 자유의 예시에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직을 맡을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 등이 포함된다.

차등의 원칙이라 불리는 제2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득을 인정하되, 그러한 경제활동으로부터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가령 자본가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득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기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평등한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1원칙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기준과 관련된 제2원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한 사회가 얻는 이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거나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롤즈가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한편으로, 차등의 원칙을 통해 기계적 평등주의에 제기되어온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가 여전히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가령 노동 의욕과 사회

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과 같이 평등주의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은 다른 한편으로, 평등의 원칙을 통해 기본적 자유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강조함으로써, 공리주의에 제기되어 온 비판을 피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기쁨과 쾌락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이며 정치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는 공리주의를 분배 정의의 주제에 적용하면, 공리주의는 행복의 사회적 총량이 극대화되도록, 권리와 의무, 소득과 부, 지위와 특전 등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공리주의는 사회 정의를 각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구체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일견 직관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만족의 총량을 정치적 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종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수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리주의 정의관은 전체 사회가 누리는 “만족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누리게 될 보다 큰 이익과 효용을 들어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TJ*, p.6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종류나 한계에 대해 단순히 “자연적인 사실과 인간 생활의 우연성”에 의존하여 정의할 뿐이기 때문에(*TJ*, p.70), 명백하게 비도덕적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들을 비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가령, 소수 인종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경우, 공리주의는 왜

그러한 차별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롤즈는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각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TJ, p.65)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롤즈에 따르면, 각자가 국가 시민으로서 누리는 평등한 자유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지니는 권리로서,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TJ, p.36).

여기서 정의의 원칙은 단순히 자연적인 사실이나 인간 사회 안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가치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숙고를 통해 합의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된다. 롤즈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숙고 결과 도출될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자유의 불가침성을 주장할 것이기에, 그러한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욕구는 정당하게 요구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옳음의 원칙들이나 정의의 원칙들은 가치 있는 만족들의 한계를 설정하며, 무엇이 각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제한을 부여한다”(TJ, p.69).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도덕적인 존재자로 생각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그러한 인격체들의 상호 협동체를 의미하는 사회 안에서 추구될 수 있는 욕구의 내용들에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평등한 자유를 불가침적인 법적 권리로서 확정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III. 『정의론』의 칸트적 배경

1. 롤즈와 칸트가 공유하는 인간관

롤즈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체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야 할 정의의 원칙은 구성원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관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이해하며, 시민들은 그러한 자기 이해에 기반하여 공리주의적 정의관보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롤즈는 「도덕 이론에서 칸트적 구성주의」에서 “인격에 대한 특정한 개념화”를 통해 “정의에 관한 제일 원칙들의 내용을 결정”³하는 방식을 칸트적 구성주의(Kantian Constructivism)로 명명하며, 그것이 핵심적으로 칸트적 자율성 개념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술한다. 칸트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할당하는 기준과 관련된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숙고 및 합의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인격관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실로 『법론』에서, 정치적 의무와 권리에 대해 논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본능적 경향성이나 감성적 충동에 의해서만 행위하는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직 타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스

3 John Rawls,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77/9(1980), p.516.

스로 창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만 법적 의무와 권리가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6:241).⁴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감성적 충동으로 행위를 하도록 자극받기는 하지만, 감성적 충동 혹은 본능적 경향성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존재자가 아니기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자로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 의지를 지닌 존재자로서 인간은 공법 체제에 기반한 사회 협동체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유를 누린다. 각자는 타인의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시민들과 동일한 공법 체제에 예속된다는 점에서 평등한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원초적 입장의 계약론적 성격

롤즈는 『정의론』에서 원초적 입장을 전통적인 사회 계약론에서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 상태로 가정되는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말하며,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정의관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의 전통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TJ, p.45). 또한 롤즈는 그러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가 순수하게 가상의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TJ, p.46).

롤즈가 자신의 정의관을 전통적인 사회 계약 사상에 연결시키

4 칸트 저작의 인용은 베를린 학술원판 칸트 전집(Kants gesammelte Schriften, hrsg.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Berlin: Georg Reimer/Walter de Gruyter, 1900ff.)에 따르며, 관례에 따라 괄호 안에 해당 전집의 권수와 쪽수를 ‘권수:쪽수’ 형식으로 표기한다. 인용하거나 참조한 한글 번역본은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는 맥락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이 단순히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협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숙고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과, 그러한 합의가 역사상 실재했던 사실이 아닌 순수하게 가상적인 상황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강조점은 실로, 홉스로부터 시작해서 로크, 루소, 칸트의 사상으로 이어지는 근대의 사회 계약 이론의 핵심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근대 이전에 국가의 입법과 통치를 관장하는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하는 주된 방식은 초자연적인 신의 명령이나 계시에 호소하거나, 특정 정치인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우월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인간이 국가법에 순응해야 할 정치적 의무는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근대적 주장은 1651년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사회 계약 사상을 전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홉스,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공법 체제를 통해 통치되는 국가 공동체로 진입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시민들의 정치적 의무가 시민들 자신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가령 칸트에 따르면, 공법 체제에 기반한 시민 공동체는 “국민이 자신을 하나의 국가로 구성하는 행위”(6:315)를 통해 성립되는 것이며, 국가의 정치적·법적 권위는 구성원들이 동의한 “근원적 계약 혹은 사회계약(contractus originarius oder pactum sociale)”(8:297)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롤즈가 자신의 정의관을 사회 계약 전통에 연결시키며 제시하는 두 번째 주장은 근대의 사회 계약 이론 중에서도 칸트가 『도덕형이상학』의 『법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이하 『법론』) 및 「이론에서

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에는 쓸모없다고 하는 속설」(이하 「이론과 실천」)에서 제시한 관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 어떠한 역사상 실재했던 사건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그 논의의 배경으로 칸트의 『법론』과 「이론과 실천」을 언급하는데, 칸트는 실로 해당 문헌들에서 국가의 정치적 권위가 기초해 있는 사회 계약이 단지 이성의 이념으로서 구성원들의 경험적인 실제 동의를 통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6:339, 8:297).

롤즈의 정의관에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오직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표상될 때, 정의의 원칙을 합의로서 도출해야할 당사자들은 단순히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만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에 반대하여 평등한 자유의 불가침성을 주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슷하게, 칸트의 정치 철학에서, 근원적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시민 상태로 진입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공법 체제를 통해 국가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는 과제가 단순히 생존이나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규범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오히려 개개인의 행복은 평등한 자유의 권리 이념에 기반한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나 독재 정부 아래에서 ... 훨씬 더 기분 좋고 훨씬 더 원하던 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6:318),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할 필요는 개인들이 추구하는 사적인 행복이나 이득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칸트에 따르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시민 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자유가 법적 권리로서 확정되지 않아 타인의 임의적인 의지에 예속될 수 있는 불의한 상태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요구된다.

IV. 롤즈의 정치적 전회

■ 앞서 살펴보았듯, 롤즈는 『정의론』과 「도덕 이론에서 칸트적 구성주의」의 여러 구절들에서,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개념이 칸트의 실천 철학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도덕적인 행위자로 이해하는 관점이 칸트의 자율성 개념에 기반해 있다고 설명하며, 원초적 입장에서 도달되는 합의를 가상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를 성립시키는 사회 계약을 구성원들의 경험적 합의와는 무관한 이성의 이념으로 특징짓는 칸트의 정치철학 이론을 인용하며 설명한다.

그런데 롤즈는 그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자신의 정의관을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롤즈는 특히 칸트의 도덕철학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정의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이후 정치적 전회(political turn)라 불리게 된 그러한 변화가 필요했던 주요한 이유는 롤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정치 철학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인 반면(PL, p.20), 『정의론』에서 논의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그러한 과제에 기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한 난점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들이 합당하게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라는 점과 관계된다.

롤즈가 말하는 포괄적 교리(comprehensive doctrine)란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가치관과 신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가령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고,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격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 사람의 믿음과 행동을 지도하는 영향력을 인생 전반에 걸쳐 줄 수 있는

도덕적 교리는 포괄적이다.

롤즈에 따르면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위와 같은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은 칸트적 자율성 개념을 포함하는 도덕적 교리를 받아들이며, 그러한 자기 이해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채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칸트적 자율성 개념에 기반한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들이 속하는 “칸트의 포괄적 자유주의”(PL, p.52)를 지지하는 구성원들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와 상이한 철학적 이론들을 포괄적 교리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안에는 정의의 원칙들이 칸트적 자율성 개념보다는 가령 신의 의지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믿는 가톨릭 신자나 토마스주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종교적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구성원들이나, 공리주의적 이거나 유물론적인 철학적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들 역시 칸트의 도덕 철학과 양립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도덕적 가치관 및 세계관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믿음들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듯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들은 그러나 민주 사회의 헌법적 질서를 승인하는 한에서 합당한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각기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인간이 이성을 자유롭게 행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이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은 이러한 자유로운 제도의 맥락에서 발

생하는 한 사회의 문화의 아주 오랜 동안의 자연스러운 산물이기 때문에..., 『정의론』에서의 주장은 사실상 해당 정의 원칙들이 그 (전제의) 실현성을 배제하고 있는 그러한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시민들이 동일한 포괄적 교리를 견지하고 있다는 전제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칸트의 포괄적 자유주의의 측면을 함유하게 되며, 공정으로서 정의의 원칙들은 여기에 속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을 전제하게 되면, 이 포괄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포괄적 자유주의는 종교적 교리나, 특정 형태의 공리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PL, p.52).

롤즈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이러한 다원성을 고려할 때, 정치 철학의 주요한 과제는 칸트의 도덕철학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합당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시민들은 무익하고 불의한 갈등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합당하지만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정적 정의관을 제시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독립적인 자유로운 견해(a freestanding view)로서 제시된다는 점과 그러한 정치적 정의관이 중첩적 합의(an overlapping consensus)의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 독립적인 자유로운 견해로서 정치적 정의관

먼저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논의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독립적인 자유로운 견해(a freestanding view)”로 특징짓는 방식을 살펴보자. 롤즈는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정의론』에서 칸트적 자율성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로 제시하였던 것과 달리,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독립적인 자유로운 견해(a freestanding view)”로 특징지어진 정치적 정의관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롤즈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속하는 정치적 정의관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덕관이긴 하지만”(PL, p.92) 사회의 기본 구조를 포함하는 정치적 영역에 적용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교리들과 구분된다. 예를 들어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들은 “인간생활에 있어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 인격의 이상들, 또한 우정과 가족 및 협회의 관계들에 대한 이상들, 그밖에도 우리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그 한계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있게 되는 반면(PL, p.95),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입헌민주정체(constitutional democracy)로 간주된 사회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 주요 제도라는 보다 제한된 영역에 적용되는 정치적 정의관이다. 롤즈는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의 예로, 칸트의 포괄적 자유주의 외에 공리주의를 든다. 공리주의는 단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행위와 인간관계로부터 사회전체의 조직뿐만 아니라 만민법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주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상 이야기”된다는 점에서(PL, p.94)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속하는 정치적 정의관과 구분되어야 한다. 정치적 정의관은 독립적인 자유로운 견해여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입헌민주정체의 기본법과 사회적·경제적 주요 제도에 적용됨으로써 민주정체의 “일종의 중심적 구성단위(module) 즉 본질적인 구성 부분”(PL, p.94)이 될 수 있다.

2. 중첩적 합의

중첩적 합의는, 합당한 다원주의를 전제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포괄적 교리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근거에서 동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롤즈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나뉘어 있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이성에 입각해서 포괄적인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중첩적 합의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그것의 심원한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지속의 가능성 또한 바랄 수 있게 된다.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만약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정의관을 지지해야 한다면, 이 정의관은 합당한 포괄적 교리이긴 하지만 상이하고 상반된 교리를 신봉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합당한 교리들 간의 중첩적 합의(an overlapping consensus)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포괄적 교리가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 이 정의관의 내용을 민주사회의 공적 정치문화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가지의 근본적 생각들로 간주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우리는 사람들의 포괄적 교리들을 무지의 장막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이

관점을 정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치적 정의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정의관은 중첩적 합의의 초점이 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 특징지워지는 사회에서 공적 정당화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L, pp.109~110, 각주 27).

민주주의 사회의 안정적인 지속을 합당하게 바랄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중첩적 합의는 단순히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특정 정치관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거나, 포괄적 교리들 사이의 평균적 입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모색될 수 없다. 롤즈가 제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따라 제안되는 중첩적 합의는 오히려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는 시민들의 공적 이성애 호소함으로써, 그 자체로 도덕적인 이상을 함축하는 정치적 정의관에 정당한 이유로 동의함으로써 도달되는 것이다. 그러한 중첩적 합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상호성의 기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자유의 우선성을 명시해야 할 것이기에, 롤즈는 자신이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 제안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가장 합당한 정의관의 적절한 후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중첩적 합의는, 단순히 상충하는 이해 관계를 가진 이들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상호 간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잠정적 타협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히 절충된 이해관계에 기반한 그러한 화합은 “절충된 이해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행운이 따라주는 상황, 즉 일종의 환경적 우연성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단지 외형적인 것일 뿐이다(PL, p.264).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이 그러한 환경적 우연성에 달려있는 잠

정적 타협과 달리, 중첩적 합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관심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롤즈에 따르면, 중첩적 합의는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관과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관”(PL, pp.266~267)과 같이 근본적 개념들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다원적인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가장 합당하고 근원적인 화합의 형태가 될 수 있다.

3.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와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

롤즈는 정치적 전회의 성격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구성주의를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구분함으로써 설명한다.

첫째,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인생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인 반면, 정치적 구성주의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될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정당화의 공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칸트의 구성주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는 정치적 정의관을 지지하는 포괄적 교리들 중 하나로서 중첩적 합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칸트적 자율성의 이상을 기초로 하는 포괄적 자유주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는 정치적 정의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

둘째,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가치가 정치적 구성주의와 일관된 방식으로 질서지어져야 한다는 것만을 요구하는 교리적 자율성(doctinal autonomy)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반면,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도덕적 및 정치적 가치들의 질서가 실천이성의 원칙 및 관점들에 의해 형성되거나, 그 자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PL, p.206)을 의미하는 구성적 자율성(constitutive autonomy)에 기반해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가치들의 질서를 적합한 정치적인 사회관 및 인간관과 결합된 실천이성의 원칙들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재현하거나 드러내는 것”(PL, p.206)만을 요구하는 교리적 자율성을 포함하는 반면, 그러한 원칙들이 가치질서를 구성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주장은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칸트의 구성적 자율성을 거부한다.

롤즈에 따르면 또한, 정치적 구성주의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에 따라 실천이성이 우리의 도덕적 의식에서 근원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실천이성에서 비롯된 그러한 원칙들이 가치 질서를 구성한다는 주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칸트적 인간관과 사회관은 현상과 물자체를 구분하는 그의 초월적 관념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사용하는 정치적인 근본 개념들의 형성 및 설명과 관련하여 초월적 관념론을 포함하는 형이상학적 교리들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다(PL, p.207).

넷째,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보다 좁은 범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받아들일 때,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공적 정당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적인 정치 문화에 이미 내재해 있어, 합당한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근본개념들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추론 및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합당한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합의는 다양한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의 중첩적 합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것이다(PL, p.208).

반면,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이론 이성과 실천이성이 정합

적으로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자연과학의 가능성과 도덕 법칙에 기반한 자유의 이념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칸트는 이성과 신념의 그러한 정합적 통일성을 설명할 수 없는 합리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 등에 반대하며, 인간 이성의 사유와 실천을 통해 이성이 자신의 능력 및 권위의 영역과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성만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였다(*PL*, p.208).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롤즈가 지지하는 정치적 구성주의 사이의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롤즈는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중첩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PL*, p.206),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합당하게 유리한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 정의로운 입헌 민주정체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이해”(*PL*, p.209)한다는 점에서 합당한 신념의 변론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칸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 사이의 위와 같은 네 가지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반면,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의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공적인 정당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칸트의 도덕적 구성주의는 초월적 관념론의 일부로서, 실천이성의 활동이 가치 질서 자체를 구성한다고 보는 반면,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치적 가치들의 질서가 “적합한 정치적인 사회관 및 인간관과 결합된 실천이성의 원칙으로 기초해 있는 것으로”(*PL*, p.206) 드러나면 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이 초월적 관념론에 기초해 있으며,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를 제시하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다원적

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의 공적인 정당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사용하는 정치적인 근본 개념들의 형성 및 설명에 있어 초월적 관념론 및 다른 형이상학적 교리들은 어떠한 역할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V. 정치적 전회의 난점

■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여전히 칸트적 자율성 개념에 핵심적으로 의존하는 바가 있어, 칸트의 도덕철학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전회의 기획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롤즈의 후기 철학이 제시하는 정치적 정의관이 여전히 칸트적인 포괄적 교리에 중요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합당성의 우선성 논제 및 정치적 인간관을 살펴봄으로써 논의될 수 있다.

1.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의 우선성

롤즈에 따르면 합당한 것(the reasonable)은 공정한 협동체계로서의 사회 개념을 구성하는 근본 개념으로서,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공정한 협동 조건을 제시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당한 자세를 취함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복지에 끼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는 자신의 도덕적 성향을 표현한다. 시민들은 공정한

협동의 원칙 및 기준과 관련된 정치적 규범을 다른 모든 구성원들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기대하며,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들은 공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합리적인 것(the rational)은 개별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판단과 숙고를 통해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합리적인 행위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채택하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합리적인 행위자는 또한 전반적인 인생 계획의 상호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채택된 목적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개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기적인 자기 이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국가, 자신이 속한 다른 공동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롤즈는 합당한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에 의해 제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의 본질적 요소로 제시하는 “옳음[권리]의 우선성(the priority of right)”(*PL*, p.297)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옳음의 우선성(그것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은 사용된 선의 개념들이 정치적 개념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인 선관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정치관 내에 적합하도록 다듬어진 개념들에만 의존하면 된다. 둘째, 옳음의 우선성(그것의 특수한 의미에서)은 정의의 원칙들이 허용 가능한 생활방식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이러한 한계를 위반하는 목적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의 주장은 비중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옳음의 우선성은 정의의 원칙들이 시민들의 숙고에 있어서의 엄정한

우선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특정한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숙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로 간주되는 바를 규정해준다”(PL, p.342).

즉,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과 목적의 성격 및 범위 자체가 사회의 공정한 협동 조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도덕적 성향 및 태도와 관련된 합당한 것에 의해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협동 조건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구되는 사적인 이익이나 목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자연스러운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이 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과 목적을 제약해야 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가령, 사회의 공정한 협동 조건을 준수하는 문제를 잠시 유예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합당성보다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봉쇄되어야 할 “광신적인 포괄적 교리들”(PL, p.21) 중 하나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은 롤즈가 “현대의 많은 도덕철학 가운데 가장 우세한 체계적 이론”(TJ, p.26)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 교리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하는(PL, p.94)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해 있다. 즉, 롤즈 스스로 공리주의를 현대의 포

괄적인 교리들 중 가장 우세하고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그는 공리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을 민주주의 사회의 헌정 질서를 승인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이들로 치부하여 중첩적 합의의 주체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의 우선성 논제는 합리적인 것이 때때로 합당한 것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공리주의의 주장에 반대함으로써만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괄적인 공리주의적 교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합당한 것의 우선성 논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국한된 영역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여전히 공리주의적인 포괄적 교리에 대한 반대를 함축해야 하고, 공리주의적인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롤즈가 제시하는 합당성의 우선성 논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롤즈의 후기 철학이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포괄적인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중립적인 정의관이 되기 어렵다. 포괄적인 도덕적 교리로 이해된 공리주의에 대한 논박을 핵심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 교리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공리주의가 자신의 정의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 근접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아마도 최선의 작동 가능한 근사치”(PL, p.294)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셰플러(samuel scheffler)가 지적하듯, 공리주의자들이 공리의 원칙과 분명한 긴장 관계에 있는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도덕적 이유에서 동의하는 중첩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하게 남아있다.⁵

5 Samuel Scheffler, “Rawls and Utilitarianism”, in Samuel Freema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452.

필자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는 과제는, 가령 공리주의적인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합당한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 언제나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 공리주의에 대항하여 선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로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옹호하는 한 가지 핵심 전략이었다.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누리는 만족과 행복의 총량의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들의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채택한 사회는 소수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소수 인종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그러한 차별이 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 공리주의는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각 시민이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IJ, p.65)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들에 대해 어떠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에 의해서도 박탈될 수 없는 위엄을 가진 존재로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도덕적인 존재자로 이해하는 한에서, “옳음의 원칙들이나 정의의 원칙들은 가치 있는 만족들의 한계를 설정하며, 무엇이 각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가치인가에 대한 제한을 부여”(IJ, p.69)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가 이해하기에 공리주의에 대한 그러한 논박은 『정

치적 자유주의』 안에서도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성의 우선성 논제를 통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합당한 이들은 자유롭게 평등한 이들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사회세계” 안에서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호성이 유지되는 것을 열망한다(PL, p.142). 반면 합당하지 않은 이들은, 공정한 협동 조건을 준수하는 문제보다 합리적인 것을 우선시하여 “여건이 허락한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러한 조건들을 위반할 준비도 되어 있”다(PL, p.143). 롤즈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합리적인 것을 합당한 것보다 더 기초적인 것으로 여기며 후자를 전자로부터 도출하고자 하는, 도덕 사상사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시도들에 대해 반대한다(PL, p.146). 롤즈는 “결국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합당한 것을 유추하려는 중대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며,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어느 지점에서는 합당한 것 자체를 표현하는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PL, p.146)이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것이 합리적인 것에 기초할 수 없다는 위의 주장들은 공리주의와 같은 포괄적 교리들에 대한 반대를 함축하며,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정의관이 결국 포괄적인 도덕적·정치적 교리에 속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칸트의 실천 철학은 합리적인 것을 합당한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정치적 영역에서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공리주의적인 정의관에 대한 핵심적인 논박이 되는 관점을 제시한다. 실로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합당한 것의 우선성 논제를 칸트의 도덕 철학을 인용하며 설명하는데, 합당한 것과 합리적인 것의 구분은 순수 실천이성을 표현하는 정언명령과 경험적 실천이성을 표현하는 가언명령 사이의 구분에 상응한다는

것이다(PL, p.141).

롤즈의 정치적 전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 역시 실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합당성의 우선성 논제나 칸트 철학에 대한 언급들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비판하는데, 가령 크래스노프(Larry Krasnoff)는 “합당한 것의 개념에 전적으로 기초해있는 정의 이론의 내용이 매우 의심스럽게 남아있다”⁶고 지적하며, 드레븐(Burton Dreben)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칸트가 언급될 때마다 롤즈의 논지가 흐트러진다고 비판한다.⁷

드레븐이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독해를 위해서 칸트 철학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포스트(Rainer Forst)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논의된 정치적 정의관의 규범적 성격은 실천이성에 대한 칸트적 개념화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논의된 합당한 것에 대한 정당화는 어떠한 경험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상대주의적 고려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적인 이성에 기반해서만”⁸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하나의 칸트적 관점으로서 가장 잘 독해”되며,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롤즈의 버전은 여전히 칸트적 관점”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Larry Krasnoff, “Consensus, Stability, and Normativity in Rawls’s Political Liberalism”, *Journal of Philosophy*, 95/6 (1998), p.292.

7 Burton Dreben, “On Rawls and Political Liberalism”, in Samuel Freema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340.

8 Rainer Forst, “Political Liberalism: A Kantian View”, *Ethics*, 128 (2017), p.130.

9 위의 글, p.143.

2. 정치적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칸트적 인간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정의관이 여전히 칸트적인 포괄적 교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시민관 내지 인간관을 검토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롤즈에 따르면,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 공정한 협동의 조건을 준수할 수 있다. 먼저, 공정한 협동 체계로서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롤즈가 정의감과 선택관 형성 능력으로 구체화하는 도덕적 능력들,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사고 및 추론 능력과 같은 이성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자유로운 시민의 첫 번째 도덕적 능력을 구성하는 “정의감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이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공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자발적 의지를 표현한다”(PL, p.102). 자유로운 시민의 두 번째 도덕적 능력은 선택관 능력으로서,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적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시민들은 정의감과 선택관 형성 능력과 같은 도덕적 능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공정한 협동 체계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인격체로 생각될 수 있다.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민주적 사상의 전통 내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시민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 생각한다. 이 기본적인 생각은 이들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정의감과 선택관의 능력)이 이성(두 가지

도덕적 능력들과 연관된 판단, 사고 및 추론)의 능력들에 비추어볼 때, 이 인격체들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사회의 충분한 협동적 성원이 되는 데 요구되는 이러한 최소한 정도의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 이러한 인격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PL, p.102).

즉, 공정한 협동 체계로 상정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공정한 협동 조건을 규율하는 정의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이익과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그런데 시민의 자유의 능력을 규정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도덕적 능력들 중, 타인들과 공정한 조건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의미하는 정의감과 관련된 논의들은,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시민관 내지 인간관이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 교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해되기 어렵다. 롤즈는 자신의 시민관이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떠한 포괄적인 주장도 포함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독립적 견해로 이해된 정치적 정의관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한다(PL, p.115, 각주 31 참조). 그러나 상호성에 기초하여 공정한 협동 조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의감은 가령 공리주의적이거나 유물론적인 포괄적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자기 이해에 기본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가령 공리주의적인 포괄적 교리들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공정한 협동 조건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의감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전체 사회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유물론적인 포괄적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인간이 단순히 다른 물질적 사물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연하게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공정한 협동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타인들과 맺는 외적 관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롤즈는 『정의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동일한 정의의 원칙들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PL, p.124)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을 여전히 전제한다. 정치적 정의관이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 및 사회적 안정성의 기초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하는 시민들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의 우선성 논제에서와 비슷하게, 롤즈가 정의감이라는 도덕적 능력을 통해 특징짓는 시민 내지 인간에 대한 관점은 공리주의적이거나 유물론적인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만큼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 자유주의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가령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자기 이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과정은 다시금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일 수 없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 개념과 관련된 자기 이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리에 대한 지지를 함축할 것이다.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한 자유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성립되는 정의관이기에,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평등한 자유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롤즈의 시민관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 교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가령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롤즈가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중국에 “정치 철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도덕적인 인격 개념에 의

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도덕적 인격 개념이 포함하는 규범적 내용들은 “선제적인 정당화(a prior justification)”¹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도덕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 내지 시민 개념은, 실로 인간성을 한낱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4:429)과 우리가 국가 시민의 위엄을 가진 이들로써 자유와 평등을 확정된 법적 권리로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6:229)을 주장하는 칸트의 실천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이어(Paul Guyer)는 롤즈의 정치적 전회에 따라 제시되는 정치적 인간관은 그가 이전에 제시했던 도덕적 인격 개념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하며, 롤즈의 정치적 전회로 인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핵심적인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¹¹

합당한 것의 우선성 논제와 정의감이라는 도덕적 능력을 포함하는 인간관과 관련하여 우리는 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단순히 정치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없다. 롤즈의 후기 철학은 여전히 가령 공리주의적이거나 유물론적인 포괄적 교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일관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옳음의 우선성 논제나 정의감에 기초한 도덕적 자기 이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여전히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인 교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힐(Thomas E. Hill, Jr.)에 따르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실

10 Jürgen Habermas, “Reconciliation through the Public Use of Reason: Remarks on John Rawls’s Political Liberalism”, *Journal of Philosophy*, 92/3 (1995), p.119.

11 Paul Guyer, “Principles of Justice, Primary Goods and Categories of Right: Rawls and Kant”, *Kantian Review*, 23/4 (2018), p.586, p.589.

로 칸트의 사회 계약 사상에 기반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치적 정의관은 스스로를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 이해하는 시민들이 합당하게 동의할 수 있는 원칙들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은 결국, 국가의 입법 및 통치 방식은 이성적인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바에 부합해야 한다는 근원적 계약에 대한 칸트적 논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3. 정치적 자유주의의 내적 긴장

본 논문은 롤즈의 후기 철학이 여전히 합당한 것의 우선성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념과 같이 강한 도덕적 전제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포괄적 교리의 한 종류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방향에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그와 같은 도덕적 주장들을 전제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논의들도 있다. 가령 김비환은 합리적인 것이 합당한 것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은 민주사회의 공적 문화 안에 칸트적 전통과 밀의 공리주의적 전통 사이의 분열 혹은 그 둘 사이의 혼합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¹³ “민주사회의 공적 문화는 공정한 사회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롤즈의 시민관은 사회 협력에 대한 그의 “개인적” 이상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와 다른 시민관을 표방하는 다른 민주주의자들”을 배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롤즈는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12 Thomas E. Hill, Jr., *Respect, Pluralism, and Justice: Kantian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238.

13 김비환,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민주적 형이상학과 사회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1996), 12쪽.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¹⁴ 더 나아가 김비환은, 합당한 것의 우선성을 도덕적인 이유에서 받아들이는 롤즈의 시민 개념은 시민의 공적 자아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여기는 롤즈의 역사주의적 전회와도 충돌한다는 점에서 지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그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형이상학적 인간관을 중심으로 제시된 정치적 정의관이 중첩적 합의의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으로 남는다고 평가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보편적인 정치 원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한, 동질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기득권 집단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실용적인 공존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비판¹⁵은 무페(Chantal Mouffe)의 비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무페는 롤즈가 양립 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를 믿는 시민들이 공적 이성을 발휘하여 정의의 원칙에 대한 중첩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획은 어떤 특정한 관점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 기반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무페는 오히려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억압된 이들에 대한 배제를 은폐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무페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활력은 단순히 합리적 합의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적대(antagonism)와 갈등의 차원이 정치로부터 제거될 수 없는 핵심 구성 요소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찾아질 수 있다.¹⁶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보편적인 합리성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원성과 적대의 현실을 경시한다는 위와 같은 비판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함축을 갖는다. 첫째, 본 논문이 롤즈

14 위의 글, 12쪽.

15 위의 글, 22쪽.

16 상탈 무페, 『경합들』, 서정연 옮김, 난장, 2020, 33쪽.

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칸트적 전제들을 강조함으로써 롤즈의 후기 철학에 귀속시킨 내적 긴장이, 현대 사회의 다원성과 정치의 적대적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들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다. 한편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칸트적인 포괄적 교리를 포함하여 특정 포괄적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른 한 편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것의 우선성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개념과 같이 정치적 정의관의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논제들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이 합당한 것의 우선성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개념과 같이 이상적인 전제들에, 롤즈의 중첩적 합의 개념이 요구하듯 도덕적인 이유로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본 논문이 주장하듯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칸트적인 포괄적 교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위 비판들이 지적하듯 결과적으로 기득권 집단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실용적인 공존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롤즈와 칸트가 실제로 취약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의 우선성과 모든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전제는 비합당한 것에 대한 임의적인 규정과 배제, 그리고 소수 그룹에 대한 기득권층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칸트의 실천철학은 지성사에서 제시되어 온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엄격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칸트적 실천철학이 정치의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과의 경쟁이 필요하고 그 설득 과정에서 일정 정도 배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배제의 맥락과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때, 그것이 기득권의 소수 그룹에 대한 억

압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러한 억압은 공적으로 합당한 것보다 특정 그룹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우선시될 때 발생하는 부정의로, 소수에 속한 이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로 재기술될 수 있다. 즉,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계승한다고 여겨지는 칸트 실천철학의 핵심이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사적인 의지의 임의적인 지배가 공적인 합의보다 우선시됨으로써 발생하는 억압과 폭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각 개개인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 및 자연적 특성을 지녔는지와 무관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은 오히려 상호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틀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을 장려하고, 상호 파괴 없이 갈등과 적대가 민주주의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을 때, 현대 사회의 심원한 다원성이 파괴적인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도덕적 본질주의에 치우쳐있음을 비판하는 무폐조차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리를 정치적 지반 위에서 긍정하는데¹⁷ 무폐가 강조하듯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선에 대한 경쟁적 해석을 허용하기 위해서라도¹⁸ 우리는 여전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당성의 이념과 각자가 도덕적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물을 수 있다.

17 위의 글, 57쪽.

18 위의 글, 54쪽.

4. 초월적 관념론의 실천적 함의

롤즈가 정치적 전회를 시도하는 한 가지 중요한 동기는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이 형이상학적으로 논쟁적인 초월적 관념론에 기초해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표방하는 합당한 것의 우선성과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시민 개념이 여전히 칸트적 실천철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장에서는,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이 형이상학적으로 논쟁적인 실재를 이론적으로 규정하거나 기술하는 데 있지 않고, 합당한 것의 우선성 및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념의 실천적 규범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논쟁적인 형이상학적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의와 인간에 대한 칸트적 개념화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여전히 칸트적인 포괄적 교리에 의존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테일러(Robert S. Taylor)가 지적하듯, 칸트는 인간 의지의 자유를 이론적인 근거에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이유로 전제한다.¹⁹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이나 본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행위의 귀책 가능성에 기반하여 행위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연 법칙의 인과성을 떠나 자신의 행동을 창시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 자유가 경험적 관찰이나 수학적 증명에 기반하여 이론적인 지식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19 Robert. S. Taylor, *Reconstructing Rawls: The Kantian Foundations of Justice as Fairnes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1, p.303.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론적 지식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의 감성 형식 혹은 그 형식 안에 주어진 경험들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인 반면, 인간 자유는 우리의 감성 형식으로 혹은 그러한 형식 안에 주어진 경험 대상으로 결코 마주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는 이론적 지식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지 않지만, 우리의 이론적 지식의 영역은 우리의 감성 형식에 의해 제약받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 원인성을 그와 같은 감성 형식에 주어질 수 있는 것 너머에 위치시키는 것에 논리적인 모순은 없다. 귀책 가능성에 기반한 도덕적 행위 및 그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실천 이성의 관심은 물자체에 대한 우리의 무지로 인해 이론 이성과 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이론적으로 논박할 수 없는 이론 이성과 조화를 이룬다.

칸트는 이러한 실천 이성과 이론 이성의 조화를 그의 초월적 관념론을 통해 설명한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법칙에 따라 이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현상으로 주어진 것들에 국한되고, 이러한 현상을 촉발한 것으로 여겨지는 물자체는 알려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과 물자체 사이의 초월적 구분에 따라, 우리는 인간 행위가 현상에서 마주쳐지는 한에서 자연 필연성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를 물자체가 놓여있는 예지계의 성원으로 여기며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창시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A538-39/B566-67).

칸트가 인간 자유의 가능성을 옹호하기 위해 초월적 관념론을 도입하고 자연의 원인성과 구분되는 예지계적 원인성을 도입할 때, 칸트의 도덕철학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형이상학적 교리로 미끌어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테일러가 지적하듯,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은 우리 경험

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적극적인 어떠한 기술도 시도하지 않는 한에서, 초월적 관념론과 예지계 관념은 오히려 인간 자유의 이념을 옹호해야 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다 잘 접근될 수 있다.²⁰ 가령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논기』에서 칸트는 예지계 개념에 대해 단지 이성이 스스로를 실천적인 것으로 여기기 위해 취할 수 밖에 없는 한 관점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한다.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행하는 원인으로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적인 자연법칙들과 다른 질서를 사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실천적인 의미 이상으로 예지계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려는 어떠한 월권도 시도되지 않는다(4:458). 다시금, 이론적 설명은 자연법칙에 따라 규정된 현상계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자유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우리의 실천적 관심을 옹호하는 것은 여전히 이론철학의 관심사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다.

요컨대 칸트의 도덕적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해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이 도입되는 것의 의의는 여전히 귀책 가능성에 기반한 도덕적 행위 및 그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을 옹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적 관심에서 설명될 수 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개념 및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의 우위성과 같은 강한 도덕적 주장들을 포함하는 한에서,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여전히 칸트적인 도덕적 포괄적 교리에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20 Robert. S. Taylor, *Reconstructing Rawls: The Kantian Foundations of Justice as Fairnes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1, pp.309~312.

VI. 결론

■ 본 논문은 롤즈의 정치적 전회를 칸트의 실천철학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롤즈는 정치적 전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의관을 양립 불가능한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인 자유로운 견해로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여전히 칸트적인 포괄적 교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다음 두 가지 논거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첫째,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합당한 것의 합리적인 것에 대한 우선성 논제는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포괄적 교리들 중 하나인 공리주의에 대한 반대를 함축한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합당한 정의보다 때때로 합리적 선이 우선시될 수 있다는 공리주의에 대한 반대를 함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포괄적 교리들 사이의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포괄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롤즈는 때때로 공리주의가 자신의 정의관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 근접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아마도 최선의 작동 가능한 근사치”(PL, p.294)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공리주의자들이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도덕적 이유에서 동의하는 중첩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둘째, 롤즈가 정치적 인간관에 귀속시키는 정의감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개념은 평등한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제시하는 칸트의 실천철학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다시금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포괄적 교리들 중 하나인 공리주의를 배제하는 중첩적 합의는 대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으로 특징짓기 어렵다.

민주주의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을 위해서도 각 시민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에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선보다는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전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핵심적으로 계승하는 그러한 칸트적 포괄적 교리는 상호 존중이라는 최소한의 틀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을 장려하고, 다양한 갈등이 민주주의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다.

◆ 국내 문헌 — 저서·논문류

김비환,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민주적 형이상학과 사회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1996), 5~23쪽.

◆ 국내 문헌 — 번역서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장동진 옮김, 동명사, 2020.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23.

상탈 무페, 『경합들』, 서정연 옮김, 난장, 2020.

임마누엘 칸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 이원봉 옮김, 책세상, 2002.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1·2,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임마누엘 칸트, 『순수이성비판』, 김정주·김화성·최인숙·최소인 옮김, 한국칸트학회 기획 칸트전집 O권, 한길사, 2000.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이충진·김수배 옮김, 한국칸트학회 기획 칸트전집 7, 한길사, 2018.

임마누엘 칸트, 「이론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에는 쓸모없다고 하는 속설」, 정성관 옮김, 『비판기 저작 I (1784~1794)』, 김미영·홍우람·오은택·이남원·정성관·배정호 옮김, 한국칸트학회 기획 칸트전집 10, 한길사, 2019, 263~317쪽.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최공웅·최진원 옮김, 동서문화사, 2022.

◆ 국외 문헌

- Dreben, Burton, "On Rawls and Political Liberalism", in Samuel Freema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316~346.
- Forst, Rainer, "Political Liberalism: A Kantian View", *Ethics*, 128(2017), pp.123~144.
- Guyer, Paul, "Principles of Justice, Primary Goods and Categories of Right: Rawls and Kant", *Kantian Review*, 23/4(2018), pp.581~613.
- Habermas, Jürgen, "Reconciliation through the Public Use of Reason: Remarks on John Rawls's Political Liberalism", *Journal of Philosophy*, 92/3(1995), pp.109~131.
- Hill, Thomas E., Jr., *Respect, Pluralism, and Justice: Kantian Perspectiv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Krasnoff, Larry, "Consensus, Stability, and Normativity in Rawls's Political Liberalism", *Journal of Philosophy*, 95/6(1998), pp.269~292.
- Rawls, John,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77/9(1980), pp.515~572.
- Scheffler, Samuel, "Rawls and Utilitarianism", in Samuel Freema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Raw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426~459.
- Taylor, Robert. S., *Reconstructing Rawls: The Kantian Foundations of Justice as Fairness*,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11.



■ 이 글은 롤즈(John Rawls)의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에서 각기 다르게 제시되는 칸트(Immanuel Kant) 철학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롤즈의 정치적 전회(political turn)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자신의 정의관이 많은 지점에서 칸트의 실천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나,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자신의 정의관을 칸트의 실천 철학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필자가 이해하기에,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포괄적으로 이해된 도덕적 교리를 함축하지 않고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가 『정의론』에 이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도 견지하는 합리적인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의 우선성 논제 및 시민 개념에 귀속시키는 도덕적 능력들에 대한 논의는, 칸트적 자율성 개념에 기반한 올바른 것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통해서만 일관되게 제시될 수 있다.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결국 칸트적 자유주의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면, 포괄적인 도덕적·철학적 교리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한 정치적 전회의 기획이 성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제어: 롤즈, 칸트, 정치적 자유주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치적 전회



Rawls's Political Turn and Kant's Practical Philosophy

Park, Kyoungnam

(KAIST, Center for Digital Humanities & Computational Social Sciences,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John Rawls's political turn by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Immanuel Kant's philosophy and the difference in Rawls's conception of justice as fairness in his philosophical works from different periods of his career. In *A Theory of Justice* (1971), Rawls makes it clear that his conception of justice reflects Kant's practical philosophy in many respects. In *Political Liberalism* (1993), however, he develops his conception of justice in such a way as to distance it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y. Yet the conception of justice as fairness that Rawls presents in *Political Liberalism* cannot be considered coherent without implying a comprehensively understood moral doctrine. More specifically, the thesis of the priority of the reasonable over the rational — which Rawls posits in both *Political Liberalism* and *A Theory of Justice* — together with Rawls's account of the

moral powers ascribed to the conception of the citizen, can only be coherently articulated through a comprehensive conception of the right grounded in the Kantian idea of autonomy. Hence, if the conception of justice as fairness must ultimately incorporate Kantian liberalism, Rawls's political turn — whereby he sought to present a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that operates independently of comprehensive moral and philosophical doctrines — cannot be regarded as wholly successful.

Keywords: Rawls, Kant, Political Liberalism,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Turn

- ◎ 투고 접수 2026. 07. 05.
- ◎ 심사 완료 2026. 08. 03.
- ◎ 게재 결정 2026. 08. 07.